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2-49호 | 2022년 12월 12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노웅래 | idp.theminjoo.kr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

- MBC·YTN·TBS 등 공영방송사의 독립성 보장

김 석 동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요약》

■ 현황: 윤석열 대통령의 MBC에 대한 취재 제한과 국제 사회에서 국가이미지 실추

- 윤석열 대통령은 MBC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여 취재 제한
- 검찰의 언론에 대한 권위주의적 행태와 같이 대통령은 언론과 소통 의지가 부재
 - 언론을 장악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언론 탄압을 통해 실정의 책임을 비판적 언론에 전가.
- 윤석열 정부는 언론 탄압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킴

■ 문제점: 언론 탄압, 대통령 권력 사유화, 알권리 침해

- 1) 언론 탄압: MBC에 대한 취재 제한, 광고 탄압, 세무조사 및 TBS 예산지원 폐지 시도
- 2)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영부인의 비공식적 권력 행사
- 3) 국민의 알권리 침해: 정상회담의 비공개 처리

■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 헌법소원,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방통위의 자율성 부여

- 1) 윤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던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
- 2)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언론계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언론 탄압 방지 협의체'를 구성
- 3)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독립성 보장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
- 4)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성 부여와 방송통신심의절차를 통해 해결
- 5) 정부와 언론 간의 이의는 정정보도 청구와 법정 판단에 맡길 것
- 6) 민주당은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에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하도록 촉구할 것

▶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MBC, YTN, TBS,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현황: 윤석열 대통령의 MBC에 대한 취재 제한과 실정 책임 전가

○ 윤석열 대통령은 MBC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여 취재 제한

-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순방 때 공영방송인 MBC를 비판적 언론으로 인식하여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
 - MBC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가 9월 윤 대통령의 런던과 뉴욕 순방 당시 욕설과 비속어 행태를 보도하여, 윤 정부와 집권당 국민의힘은 MBC에 항의 방문하고 취재를 제한함.
 - 반면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영상을 취재·보도한 대통령실 출입 영상 기자단에 ‘뉴스특종단독보도’ 부문상을 12월 5일에 수여함.
- ※ 수상 이유로서 협회는 “해당 영상의 온전한 보도와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 기자단이 보여준 행동은 저널리즘 윤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힘.

○ 검찰의 언론에 대한 권위주의적 행태와 같이 윤 대통령은 언론과 소통 의지가 부재

- 특수부 검사와 검찰기자단의 관계는 정보를 주는 이와 받는 이의 관계여서 갑을관계, 수직관계로 전락하기 쉬움.
 - 수사 특종 정보를 받아 수사 단독 기사를 쓰기 위해, 검찰기자단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감시, 진실과 정의 추구라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기 쉬움. 단순히 검사들의 입을 자청하고, 검사들이 하는 말, 검사들이 주는 자료를 홍보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수 있음.
 - 윤 대통령은 검사로 30년 내외 재직해왔고 대통령으로서는 고작 약 6개월을 재직 중이어서, 정치인으로서 언론과의 소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
- 검찰의 언론에 대한 권위주의적 행태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의 언론관에 투영됨.

○ 윤 대통령은 언론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장악의 대상으로 간주

- 언론 탄압 방식: MBC·YTN·TBS 등의 공영방송사에 취재 제한, 광고 탄압, 세무조사, 지분 매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입, 예산지원 폐지 등.
- 윤 대통령은 MBC 전용기 배제 결정에 “해외 순방에 중요한 국익 걸려”있다는 이유를 제시.
 - 윤 대통령의 발언: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
 -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정부 3부라 하나, 언론이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여, 언론을 포함하여 4부라 언급함.
- 언론인은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전달하므로 국민의 대변자임.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해서 언론과 소통이 필수적임.
- 외교에서 여야 간의 초당적 합의와 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을 통해 국익 극대화가 가능함.
 - 진보와 보수 간 국민통합을 위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언론의 비판과 감시를 허용해야 함.

○ 윤석열 정부는 언론 탄압을 통해 실정의 책임을 비판적 언론에 전가

- 야당·시민사회의 비판: 이번 윤 대통령의 결정은 해외 순방 당시 욕설 비속어 파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는 것.
- Morning Consult의 2022년 11월 15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6%(부정 평가가 79%)임. 오랜 기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지도자(대통령 또는 수상) 중에서 최하위에 머무름.

○ 윤석열 정부는 언론 탄압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킴

-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문 정부 집권기인 2021년이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점수임.
- RSF는 11월 23일에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제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발표. 언론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여 한국의 2023년 언론자유지수 하락이 예상됨.
-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사퇴 압박에 이어, 검찰은 ‘종편 재승인 감점 의혹’ 방통위를 압수 수색함. 닷새 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
- 하지만 언론자유도 조사에선 기자들이 답한 문 정부 집권 시기인 2021년이 2007년 조사 개시 이래 가장 점수가 높았음(한겨레 2022/06/27).
- MBC에 대한 언론 탄압에 대해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Diplomant)은 9월 30일 한국 대통령실과 여당이 방송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하고, 지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함.
- 그 매체는 대통령실의 윤 대통령 욕설 발언 해명에 대해 그때부터 ‘전국 듣기 평가’가 시작됐고 모든 사람이 해당 영상 소리를 해석하기 위해 애를 썼다며 그 해명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
- 거의 모든 국내외 매체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비슷한 해석을 해 보도했음에도 대통령실은 MBC에만 보도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음. 즉 대통령이 MBC를 희생양(scapegoat)으로 삼았음.
-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매체인 미국의소리(VOA: Voice Of America)도 윤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라는 국가 명성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

2. 문제점: 언론 탄압, 대통령 권력 사유화, 알권리 침해

1) 윤 정부의 언론 탄압: 취재 제한과 광고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 (1) 취재 제한: 윤 대통령은 MBC 기자의 비판적인 질문 이후에 ‘도어스테핑’ 중단을 결정하여 언론과의 소통을 차단함.
- 전임 정부와의 비교: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적인 기자에 대한 제재나 취재 제한이 없었음.
- 2019년 1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예령 기자가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함.
- ※ 빈정거리는 듯한 기자의 태도에 대해 부적절하고 예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언론과의 소통도 부재할 뿐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도 부재.
 -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회동은 여러 차례(공식적 회동만 5번) 가졌지만, 야당 대표와의 회동과 소통은 현재 12월까지 대통령직 수행 반년이 지나도 없었음.
 - 반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에 야당 대표와 회동함.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내외 해외 순방 시에 MBC 취재 제한과 김건희 행태를 비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함.

(2) 광고 탄압: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MBC에 광고를 넣지 말라는 취지로 국내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자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인 삼성전자를 압박함.

- 문화방송(MBC)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광고 불매 운동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함.
- 집권 세력(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광고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통제 방식임.
 -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기인 유신헌법 이후 1974년에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대한 정권의 압력으로 기업 광고가 실리지 못함. 광고 불매 운동은 언론 탄압의 전형적 방식임.
 - 2013년 대법원 판례: 광고 불매 운동은 강요나 공갈 등 협박에 해당. 국민의힘은 헌법준수와 동시에 자유 시장 경제를 존중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 있음.

2) 세무조사: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비판적 언론을 억압

- MBC의 대통령 욕설 보도 이후 국세청은 MBC에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추징금 부과.
 - MBC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예고.
- 국세청의 MBC에 대한 세무조사와 징벌적 추징금은 비판적 언론사들에 재갈을 물리는 것.
 - 이번 세무조사 결과로 520억 원의 추징금은 MBC의 1년 영업이익 수준으로 이례적.
-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세무조사는 정치보복 수단으로 변질하여 국세청은 권력기관으로 기능.
 - 일례로,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노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결국 강 회장을 구속함.

3) 지방정부의 언론 탄압: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예산지원 폐지를 시도

- 2022년 지방선거 후 서울시의회를 다수당으로 장악한 국민의힘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킴.
 - 해당 조례안은 TBS 관련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 TBS는 연간 예산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므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TBS는 존폐 위기에 내몰림.
- 특정 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원 조례를 폐지해 TBS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언론 탄압임.

4)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영부인의 비공식적 권력 행사

- 윤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7월 나토 순방 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지인을 1호기까지 탑승시킨 반면, 공영방송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함.
 - 이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유화하고, 영부인은 비공식적 권력을 행사한 것임.
- 김 여사는 공식적 외교 행사에 불참하고 편향적 내용 공개로 영부인 이미지 개선에 공들임.
 -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국 캄보디아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계 정상 배우자들에게 세계적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김 여사는 이 행사를 거부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함.
 - 김 여사의 행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외교적 결례. 1) 캄보디아가 요청하는 외교적 행사를 거부하였다는 점. 외교적인 상호존중은 문화유산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의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임. 2) 의료취약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아서 그 국가의 빈곤 이미지를 부각하였다는 점.
 - 이러한 김 여사의 행태는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비판을 야기.
- 윤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대통령 개인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보임.
 - 대통령 전용기는 정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공적인 자산이며, 대통령실의 선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

5) 국민의 알권리 침해: 정상회담의 비공개 처리

- 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비공개 처리하여 취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언론 존재를 부정함.
 - 대통령과 함께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 행사인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취재 못함. 대신 전속기자단만 들어오도록 해서 정상회담장을 취재하도록 함.
 - 대통령실 전속 취재의 경우, 공개 회담 전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된 발언과 영상·사진만이 전달. 핵심 일정이었던 두 회담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

3.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 헌법소원,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방통위의 자율성 부여

1) 윤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던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

- 기자의 전용기 탑승은 편의 제공뿐 아니라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 언론의 자유에 해당. MBC 기자에 대한 탑승 배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법치를 훼손.
 - 언론 보도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익 기준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 공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언론의 역할을 특정 정치세력의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 됨.
 - 대통령실은 언론인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2)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언론계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언론 탄압 방지 협의회’를 구성

-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진보 진영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언론도 언론 탄압 방지를 위한 협의회에 참가할 필요.
 - 언론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한겨레>와 <문화방송(MBC)>, <경향신문>은 대통령 전용기 이용을 거부하고, 민항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일정을 취재.

※ 해외 사례: 미국 언론계도 언론 자유에 대한 물지각한 인식 수준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까지 박탈했던 행태를 비판하며,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트럼프의 언론 탄압에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음.

- MBC 취재 제한에 대응하여 8개 현업 언론인단체는 11월 10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함:
참여 단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에 언론계와 공동 대응해야 함.
 - 이번 탄압 대상은 MBC이지만, 진보 진영이든 보수든 간에 어떤 언론사도 언론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언론사 공동의 대응이 필요함.

3)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독립성 보장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

- MBC와 KBS 등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
 - 윤 정부는 YTN 지분매각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개입함.
 - ※ YTN 매각을 통한 민영화 시도는 다양한 채널 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보도채널 영역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하는 것이자 윤 정부 언론장악의 외주화임.
 - YTN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의 매각 의결을 졸속 결정이자 배임으로 간주하고 배임죄 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
 - 또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서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함.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
 - ※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내용: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에 각각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언론 관련 학회, 방송협회, 종사자 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함.
 - ※ (11월 29일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안의 목적: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
 - ※ 내용: (1) 공영방송사에서 이사회 정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경로를 다양화해 방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 (2)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 (3)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별, 지역별을 고려해 100

명 규모의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추천위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 중 재적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정할 수 있게 해 특정 정치 계파에 속한 사장의 임명을 방지.

※ 기대효과: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되어온 정치권의 공영방송 임원 선출 관행을 철폐.

4)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성 부여와 방송통신심의절차를 통해 해결

-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사의 방송 공정성은 자율성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 절차를 공정히 수행하여 확보 가능.
 - TBS의 경우도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통신심의절차, TBS 내부 공정방송위원회 등과 같이 TBS 내부와 외부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 담보 가능.
 - MBC·YTN 민영화 시도에 대해, 방통위가 자율성을 가지면, 공영방송사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받아서 승인할 때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은 과거부터 MBC의 민영화를 시도해왔고 올해에는 YTN 민영화를 시도함.
 - YTN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대기업이나 편향된 특정 언론사에 자본에 넘길 수 없음.
- ※ 과거 YTN 지분이 공기업으로 넘어간 이유는 뉴스채널은 다른 어떤 채널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요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YTN 지분을 사기업인 재벌에 처분하면 공정성이 훼손.

5) 정부와 언론 간의 이익은 정정보도 청구와 법정 판단에 맡길 것

- 특정 언론 취재 배제는 대통령의 공권력 남용으로 국가폭력의 한 형태임.
 -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MBC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
 - 보도 내용에 대통령실·정부와 언론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다면 특정 매체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견해차가 크다면 절차에 따라 법정에 가서 해결해야 함.

6) 민주당은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에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하도록 촉구할 것

- 서울시의회를 다수당으로 장악한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TBS 예산지원 중단 조치를 함.
- 민주당은 이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청하도록 요구해야 함.
 - 왜냐하면 조례 폐지로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상위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
- TBS는 행정소송을 조례안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 가능.
 - TBS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기간으로 방통위로부터 방송허가면허를 받았으므로 이 기간에는 서울시에서 방송사를 운영할 만한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전제가 있음. 서울시의회가 TBS 예산지원을 폐지한 것은 일종의 협약을 지키지 않은 셈이므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
-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의 언론을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대항하여, TBS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연대해야 함.
 - TBS는 언론계로부터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표방하며 ‘우리동네 라디오’ 등의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등 공영미디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평가를 받음.